

한라포커스 '표준주택' 선정 진위는

제주도-국토부 서로 “네 탓” 진실공방

표준주택 선정·공시가격 산정 논란 치열한 다툼
 제주도 “서류 의존 탁상행정으로 도민들만 피해”
 국토부 “행정시 공부 기초… 표준선정 하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부가 표준주택 선정과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영향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국토부가 산정한 도내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상 및 지방세 과세대상)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즉 행정시의 공부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진실 공방

▶ 폐가·공가=제주도는 18개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 주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도는 1개 폐가(A)를 표준주택에서 제외한 후 그 옆의 폐가(B)를 다시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며 국토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나 나머지 폐가 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 개·보수 주택=제주도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같이 개·보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도의)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4건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하는 1건도 농어촌정비법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일부 현장 확인이 부실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 무허가 건물=제주도는 무허가 건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으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9년 표준주택 중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주도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개별공시가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표준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2019년 공시가격이 60억 5600만원에 달했고, 인근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이 전혀 없으며 주로 3억원 내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초고가 주택은 비교대상인 표준주택이 부족해 적절한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주택을 직접 표준



동박새와 동백꽃 18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공원을 찾은 동박새 한 마리가 동백꽃을 먹기 전 동백나무 위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다. 강희만기자

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공시되도록 했고, 해당 초고가주택은 다른 단독주택 가격산정에 활용하지 않아 다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에 기

초해 이뤄졌다고 한 것은 오로지 서류에 의존해 탁상에서 산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을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산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올해 청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제주도,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88개 정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619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청년 삶 전체를 아우르는 5대 정책분야에 88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 분야 36개 사업에 241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분야 일자리 신규 창출 등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주거 분야 7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전·월세를 지원해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교육 분야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178억원을 투자해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희망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청년문화매개 특성화 사업, 제주 청년의 날 등 10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해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청년 김이어 체험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참여·관리 분야 19개 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해 청년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기반을 구축한다.

해법을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제주특별법 개정 등 감안 확정안 마련

도선거구획정위 어제 3차 회의서 현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제주특별법 안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감안한 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제주도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3개 정당과 제주자치도교육감 등으로부터 받은 제주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앞으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흥철 위원장은 “선거구 통폐합과 분구로 파생되는 도의원정수 문제와 교육의원 존치·폐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제주특별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과 법 개정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인구는 2018년 제7회 지방선

거 이후 4만명 이상 증가했고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전환하며 내년 제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기존 선거구를 나누거나 인구가 줄어든 인근 선거구와 통합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원 지역구는 총 31개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 선거 6개월 전인 올해 말까지 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18일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시농협

진심의 손에서 안심의 손까지

농업인에게 든든함을! 소비자에게 건강함을!

진심의 손으로 키워온 농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가 진심과 안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하나로마트 제주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4
하나로마트 오라점 747-6260
하나로마트 노형점 750-6500